



지방직 9급 추가선발시험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 지방직 하반기 추가채용 9급 행정학 문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 또는 기출문제를 소폭 변형하여 출제하여 어렵지 않은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 ‘딜레마 이론’과 ‘공무원 연금의 재원 형성 방식’이 기출변형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 나머지 신공공서비스, 조직구조의 유형, 정책네트워크, 품목별예산제도, 행정통제 등 18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연습하고 공부했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문제가 모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COMPASS 행정학으로 준비한 수험생 모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2017 지방직 하반기 추가채용 9급 시험으로 2017년 시험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올해 시험일정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신용한 드림 -

2. 출제영역분석

총론	5	재무행정론	3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3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3	지방자치론	2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8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11	1	1	2	-	4	1

0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관료가 반응해야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해설】 ② [X] 정부의 역할이 노젓기(rowing)인 것은 전통적 행정이론에서이며, 방향잡기(steering)는 신공공관리론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 올바른 지문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나 노젓기(rowing)가 아닌 봉사이다.

summary | 전통 행정이론 vs 신공공관리론 vs 신공공서비스론

구 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 및 인식토대	• 초기 사회과학이론	• 신고전파 경제이론, 성과관리론	•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복합적
합리성과 인간행태	• 개괄적 합리성 • 행정인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 경제인	• 전략적 합리성 •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 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 이익의 총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대응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정부역할	• 노젓기(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 목표에 초점을 둔 정책 설계와 집행)	•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집단이익의 협상과 중재)
책임성 확보	• 위계적	• 시장지향적	• 다면적
행정재량	• 공무원에게 제한된 재량 허용	• 목표달성을 위한 폭넓은 재량	•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조직구조	•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	• 분권화된 조직	• 리더십이 공유되는 협동적 조직
동기유발	• 보수와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정신	• 사회봉사, 사회이익에 기여하려는 욕구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76~178

▶ ②

02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된다.
- ②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 ③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해설】 ① [X] 부성화의 원리는 분화(분업)의 원리에 해당한다(분업의 원리 - 동부모기분업).

▶ 올바른 지문

① 부성화의 원리는 분업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summary | 분화(분업)에 관한 원리

주요 원칙	주요 내용
분업(전문화)의 원리	• 업무의 세분화를 강조 : 업무를 세분할수록 능률적 ·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 • 지나친 분업(전문화)은 심리적 소외감, 비인간화,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trained incapacity) 등의 역기능을 초래함.
부성화 (업무집단화)의 원리	• 동질성의 강조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연관된 업무를 묶어 조직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리 •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음.
참모조직의 원리	• 참모와 계선과의 구별 강조 : 계선조직의 보완을 위해 참모조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명령계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참모조직을 명령계통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원리
기능명시의 원리	• 분화된 모든 기능 또는 업무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리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38, 339



03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 【해설】 ① [X] 딜레마 상황은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가치 간 갈등이나 가치 간 비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결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말한다.
- ③ [X]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려면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분절성, 단절성).
- ④ [X] 단절성(분절성)은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선택 불가피성(unavoidability)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가치 간 갈등이나 가치 간 비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절충안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선택 불가피성(unavoidability)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79

▶ ②

04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 ②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 ③ 위원회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 ④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 【해설】 ② [X] 기계적 조직에서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고위결정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③ [X] 위원회 조직은 독임형 조직과는 달리 복수의 의사결정권자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④ [X]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애드호크라시도 조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관료제에 비해 비효율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애드호크라시는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 올바른 지문

- ②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다.
- ③ 위원회조직은 복수의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차이가 있다.
- ④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23, 326, 348



0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 ③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 · 제한적이라고 본다.

- 【해설】 ① [X] 현대 엘리트 이론에서는 소수의 지배엘리트들(지배계급)과 다수의 피지배자가 구분되며, 정책은 엘리트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X] 공공선택론은 개인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삼고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한다(방법론적 개체주의).
 ④ [X] 조합주의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를 소극적 ·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된다고 본다.
- ② 공공선택론은 집단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 · 주도적이라고 본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35, 198~201



0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 【해설】 ① [×] 하위정부와 비교할 때 정책공동체에서의 참여자의 범위가 넓다.
 ② [×]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는 이슈공동체이다.
 ③ [×]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네트워크는 특정 정책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결정이 이뤄진다. 다만, 하위정부 모형도 소수의 엘리트들이 특정한 영역에 지배력을 행사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정책공동체의 참여자는 하위정부에 비해 참여자 범위가 넓다.
- ② 이슈네트워크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이다.
- ③ 정책네트워크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summary | 하위정부 vs 이슈네트워크 vs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모형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관료 + 의회 상임위 + 이익집단	광범위한 다수의 참여	제한된 참여(관료,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
안정적 · 폐쇄적	불안정(유동적, 일시적)	안정적(지속적, 장기적)
이해관계 일치(동맹적)	경쟁적, 갈등적(Negative-sum game)	의존적, 협력적, 신뢰(Positive-sum game)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의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	권력의 다원론과 상관성 큼.	뉴거버넌스와 연관된 개념, 정책내용 합리성 제고
참여자	(제한)	하위정부 - 정책공동체 - 이슈네트워크 (광범위한 참여)
연계작용	(안정)	하위정부 - 정책공동체 - 이슈네트워크 (불안정)
의존성	(협력적)	하위정부 - 정책공동체 - 이슈네트워크 (갈등적)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04~207



07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1>의 인물과 <보기 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리그스(F. Riggs)	ㄴ. 가우스(J. Gaus)
ㄷ. 화이트(L. White)	ㄹ. 사이먼(H. Simon)

<보기 2>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	

- ① ㄱ-A
- ② ㄴ-B
- ③ ㄷ-C
- ④ ㄹ-D

【해설】 ㄹ. 사이먼(Simon) - D : 사이먼은 고전적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굴릭이나 어웁이 제시한 고전적 조직 원리들은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 올바른 지문

-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 ㄴ. 가우스(Gaus)
-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POSDCoRB). : 굴릭(Gulick)
-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애플비(Appleby)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11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해설】 ① [X]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며, 평가작업이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 ② [X] 점수법은 공통적이고 중요한 평가 요소를 선정해 그 비중을 결정하고, 평가 요소의 단계를 구분하고 정의해야 하며, 거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③ [X]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방식으로 그 어느 방법보다도 요소비교표를 만들기까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점수법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가장 많다는 단점이 있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달리 시행이 어려워 점수법보다 광범위한 사용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summary | 직무평가 방법의 비교

비교기준	직무평가의 방법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사용빈도	가장 적음.	둘째나 셋째	가장 많음.	둘째나 셋째
비교방법	직무와 직무	직무와 기준표	직무와 기준표	직무와 직무
특 징	서열을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치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요소별 배점	대표 직위의 선정과 요소별 보수액 배분
평가방법	비계량적 방법	비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평가대상	직무 전체	직무 전체	직무의 평가요소	직무의 평가요소

0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 ②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 ④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 【해설】 ① [X]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정도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 ③ [X]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이다.
- ④ [X]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우리나라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 ④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71~474

▶ ②

10 공무원 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해설】 비기금제가 일종의 부과방식이며, 기금제는 적립방식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문제는 '기금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으로 바꿀 수 있다.

- ② [X] 적립방식(기금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 ①, ③, ④ [O] 해당 보기들은 연금지급의 지속성, 안정성을 말하고 있다. 적립방식(기금제)은 연금급여의 지속적 지급을 보장할 수 있어 연금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올바른 지문

- ② 적립방식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36, 537

▶ ②

11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해설】 ①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며 회계책임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83

▶ ①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해설】 ④ [X]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으로 지방의회만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summary | 기관통합형 및 기관분리형의 장단점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권한이 집중되어 책임정치 실현에 용이 ② 의결·집행기관 사이의 알력을 피할 수 있음 ③ 신중하고 공정한 통치 가능	① 견제와 균형이 결여되어 권력 남용 우려 ② 행정의 전문성 저해 ③ 단일의 지도자가 없어 책임소재가 모호함

• 기관분리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방지 ② 집행기관 전담을 통한 행정의 전문화 ③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책임의 명백화	① 기관 간 대립알력의 심화 ② 주민대표기관에게 책임귀일의 약화 ③ 단일지도자에 의한 편견적 결정 가능성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20~822

▶ ④

| 말 바꾸기 |

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 ③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해설】 ④ [X]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부처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하향적 예산편성제도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기획)과 부처 자율(분권의 접근)을 결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하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99, 700

▶ ④

| 말 바꾸기 |

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감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③ [X] 입법통제는 입법·예산심의, 국정조사·감사, 임명동의·해임건의·탄핵 등의 장치를 통해 통제하는 외부-공식적 통제 방법이다.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사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50~752

▶ ③

| 말 바꾸기 |

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② [X]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 경우 이용자인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 올바른 지문

②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summary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필요성	① 양적 팽창과 질적 전문화로 복잡화된 행정을 보다 효율적·광역적으로 수행함. ②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제점	① 중앙통제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② 지방행정의 종합성 상실, 행정의 할거성이 강화됨. ③ 지방행정기관의 이원화로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 상실을 초래 ⑤ 지방자치단체와 마찰 증대(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의 우려가 있음.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93~894

▶ ②

| 말 바꾸기 |

1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규제가 초래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해설】 ④ [X]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올바른 지문

④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7, 38

▶ ④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해설】 ① [X]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X]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평가(자체평가 X)이다.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X]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특정평가 X)이다.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한다.
- ②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summary |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및 종류

중앙·지방 자체평가	①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 실시 ② 재평가 : 국무총리는 자체평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
특정평가	국무총리는 국정 통합관리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시책 및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해 실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 실시 가능
공공기관평가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평가 실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공공기관 관리 법률에 의한 평가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02~305

▶ ③

18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해설】 ③ [X] 점증모형은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합리모형과는 달리 다수의 참여자들 간에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점증모형은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합리모형과는 달리 다수의 참여자들 간에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34, 635



1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 ③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④ [X]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이 아니라 서비스전달체계와 같이 조직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 올바른 지문

-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보다 통합적인 일처리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41, 442



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 ④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해설】 ③ [X] 행정지도는 급격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행정의 적시성·상황적응성·간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피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summary | 행정지도의 폐단과 개선책

폐 단	개선책
①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가능성	① 민주주의 이념의 내재화
② 불분명한 행정책임의 발생	② 절차의 정당성 제고
③ 피해자 구제수단의 미비	③ 권익보호의 통로 확대
④ 행정의 밀실화로 인해 제3자나 공익에 대한 침해가능성 및 행정의 형평성 상실가능성	④ 행정의 간여범위 축소
⑤ 행정의 과도한 팽창	⑤ 법의 현실적합성 제고
	⑥ 행정지도의 효율성 제고
	⑦ 공무원의 행태 개선
	⑧ 행정체제와 환경의 거시적 개혁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6,27

▶ ③